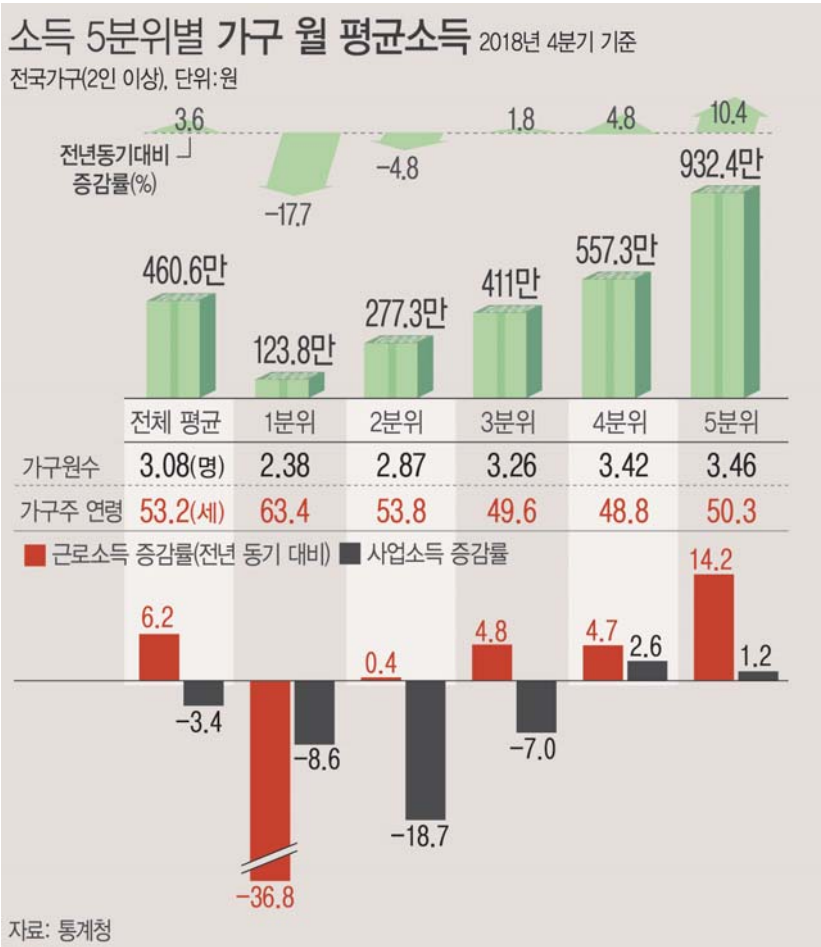


분배 역대 최악...자영업자 사업소득 13분기만에 후퇴

통계청,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

월평균 소득 460만원...하위 20% 124만원·상위 20% 918만원
부유층 소득, 빈곤층의 5.52배...4분기 기준 통계 작성 후 최대



지난해 4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또다시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내수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들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이 13분기만에 감소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460만6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분기별 소득 증감률은 지난해 1분기 3.7%, 2분기 4.2%, 3분기 4.6%로 4분기에 가장 낮았다.

가구 소득 중 가장 큰 비중(67.6%)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사업체별 임금 상승도 지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통계 당국은 판단했다. 시중금리 상승과 개인연금소득 증가 등에 따라 재산소득도 4.9% 늘었다.

그러나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3.4% 감소했다.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5년 3분기(-1.8%) 이후 13분기만에 처음이며 4분기 기준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내수 부진 등에 따라 자영업자 가구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주점업 등에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파이는 커졌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소득 수준에 따라 5분위로 구분한 지표들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 -8.0%, 2분기 -7.0%, 3분기 -7.0% 감소했었다. 4분기에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것이다. 소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로 바도 감소 폭이 역대 최대치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5분위 가구 소득은 지난해 1분기 9.3%, 2분기 10.3%, 3분기 8.8% 늘어 4분기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차하위 계층과 차상위 계층 간 소득 격차도 여전한데, 하위 20~40% 2분위 가구 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줄었다. 반면 상위 20~40% 4분위 소득은 557만2900원으로 4.8% 증가했다.

2분위 소득 감소엔 사업소득이 18.7% 줄어든 것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박 과장은 "2분위 가구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17년 4분기 24.4%에서 지난해 4분기 19.3%로 5%p 가까이 떨어졌고 같은 기간 무직 가구 비중은 17.3%에서 19.2%로 상승했다"며 "내수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도 양극화 정도가 심해졌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같이 꼭 내야 하는 비용(비소비지출)을 제외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1분위(-19.5%)와 2분위(-5.3%)의 처분가능소득은 줄었지만 3분위(0.5%), 4분위(3.3%), 5분위(8.6%) 처분가능소득은 늘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98만8200원,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726만500원으로 7배가량 차이난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 중 하나인 '5분위 배율'을 보면 악화된 분배 상황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해 상위 20%와 하위 20% 간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다.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5배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지난 3분기 5.52배를 기록하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그 폭이 다소 낮아졌다. 1년 전(4.61배)보다는 0.86배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4분기만 놓고 보면 소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 과장은 "지난해 고용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 분배 정도를 악화시킨 가장 큰 요인"이라며 "시장 상황의 악화 정도가 소득 분배 상황을 개선시키려 하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시행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이 전시되어 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기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작년 해외서 급은 카드값 21조 돌파... '역대 최대'

해외 여행객 늘어나면서 카드사용액도 증가세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2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쓴 카드 결제금액은 192억2000만달러로 전년(171억4200만달러)보다 20억7800만달러(12.1%) 증가했다. 증가세는 전년(19.9%) 수준에 못미쳤으나 규모로는 역대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평균 1100.3원)을 감안해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1조1478억원에 달한다. 해외 카드사용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에서 쓴 카드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무엇보다 해외 여행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105억4600만달러였던

해외 카드사용액은 2014년 122억100만달러(15.7%↑), 2015년 132억6400만달러(8.7%↑), 2016년 143억달러(7.8%↑), 2017년 171억4200만달러(19.9%↑) 등으로 지속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해외로 나간 내국인 출국자수가 1년 전(2680만명)보다 8.3% 늘어난 2870만명에 달했다. 다만 증가율은 전년(18.4%)보다 다소 둔화됐다. 이례적으로 2017년 추석 연휴가 사상 가장 기간인 열흘에 달해 해외 여행객수가 급증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점도 해외 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00.3원으로 전년(1130.8원)보다 다소 떨어졌다.

카드 사용 자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영향도 있어 보인다. 지난해 해외에서 사용된 카드 장수는

6384만장으로 전년(5524만7000장)보다 15.6% 늘었다. 종류별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136억1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9.3% 늘었고 체크카드는 53억6000만달러로 22.4% 급증했다. 직불카드는 2억4200만달러로 20.7% 감소했다. 카드 장당 사용금액은 2017년 310달러에서 지난해 301달러로 축소됐다.

한편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실적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비거주자의 국내 카드사용액은 92억8900만달러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17년 85억21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0.4% 고꾸라졌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 국면이 다소 해소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일부 되돌아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6년(107억800만달러) 실적에 비해서는 아직 부진한 상황으로 원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진 못했다.

뉴스스

광주전남중기청,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이재홍)에서는 수요처가 있어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제품의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참여과제를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이다.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민관공동투자과제 및 R&D PIE과제로 구분되며, 지원방식은 과제에 따라 지정공모와 자유응모방식이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외 수요처나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 동의서나 개발요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단, R&D PIE과제의 경우는 수요처의 구매협약동의서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

과제당 지원규모는 최대 2년간,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37.5%~65% 이내에서 최대 6억원 한도이며, 수요처에서도 총 사업비의 15%~37.5%를 부담하여 지원하게 된다.

서은홍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